

2026년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심화와 자산과 세 후퇴 진단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근거로 한 비판적 검토

먼저, 공주민제(DCA)를 2분 만에 이해하기

이 자료집은 “자산불평등이 불가피가 아니고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며,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금융에도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재분배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공주민제(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는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되, 결론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인다.

- **세금(현금)**은 매년 정치로 싸우고 후퇴한다.
-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얼마를 걷어 무엇을 해주나”만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본소득(배당·이자·시세차익)과 결정권이 애초에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규칙을 설계하나가 핵심이다.
- DCA의 한 줄 정의: 시민이 ‘소득의 사후 분배’가 아니라 ‘자산·지분의 사전 귀속’에 참여하도록, 국가·사회가 만들어내는 둑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신탁·계정)에 누적 귀속시키는 제도다.

여기서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 최소한만 쓴다.

- 시민 공동자산(시민신탁/시민계정): 세금으로 거둔 돈을 그해 다 써버리는 대신, 일부를 **자산(지분·수익권)**으로 바꿔 쌓아두는 “국민 공동의 자산 그릇”이다.
- 조세의 지분전환(TEC)(처음 등장): 어떤 세목(예: 법인세 일부, 자본이익 과세 일부)을 현금으로만 받지 말고, 일정 비율은 “주식·수익권” 같은 자산 형태로 받아 시민 공동자산에 넣는 방식이다. (이 자료집 독자가 모르는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현금세 → 자산귀속” 정도로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2026년 경제 전망과 자산불평등 현황 진단(정세은) 에 대해

(1) 원문 요지(핵심만)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부채 불평등이 더 심각하고, 특히 고소득·고자산 계층이 더 많은 부채

를 통해 자산증식에 나서며 격차를 키운다는 점을 통계로 제시한다.

(2) DCA 관점의 결손(무엇이 빠졌나)

이 진단은 정확하다. 다만 처방이 “과세 강화”로만 이어지면 다음 공백이 남는다.

1. 레버리지(빚) 접근권의 비대칭

부자들이 빚을 더 내서 자산을 불린다는 말은, 단순히 “부자가 욕심이 많다”가 아니라 금융 접근권(담보·신용·정보·상품 접근)의 비대칭이 엔진이라는 뜻이다. 세금 만으로는 이 엔진을 완전히 멈추기 어렵다.

2. ‘부채를 줄여라’가 아니라 ‘시민도 자산을 가져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

불평등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이 쓰나”가 아니라, 누가 자본소득을 구조적으로 받나다. 자본소득의 ‘발생원천’을 바꾸지 않으면, 매년 재분배를 두고 정치가 소모되고 후퇴한다.

(3) DCA식 수정안

발제 1의 결론부에 아래 3문단을 덧붙이면, “진단 → 제도 전환”으로 연결된다.

- **레버리지 격차의 본질은 ‘접근권’ 격차다.** 고자산층은 담보·신용·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그 접근이 다시 자산증식을 낳아 격차를 되먹임한다. 따라서 불평등 대책은 ‘부채 억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 접근 통로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 **세금은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세금은 매년 정치적으로 바뀌고 후퇴할 수 있다. 반면 자산(지분·수익권)의 귀속 규칙은 한번 고정되면 장기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불평등 대책은 “현금 재분배”와 함께, 시민 공동자산(신탁·계정)에 자본소득의 원천을 누적 귀속시키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 **‘현금복지 + 자산귀속’의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 취약계층 보호는 현금(복지)이 담당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자본소득을 받는 기반(시민 공동자산)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DCA(공주민제)가 말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길’이다.

감세정책 영향과 현행 조세체계 구조 진단 및 제언 (김현동)에 대해

(1) 원문 요지(핵심만)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 비중이 보유세보다 높고, 현재 결정례 등을 근거로 거래세보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입법론으로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제시한다.

또한 취득세가 지방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라 세율 인하 시 대체재원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2) DCA 관점의 결손(무엇이 빠졌다)

발제 2는 “세목 설계”를 정교하게 다룬다. 다만 DCA 관점에서는 다음 질문이 추가로 필요하다.

1. 보유세를 올리면, 그 돈은 ‘누구의 자산’이 되나

보유세를 강화해도, 그 세수가 단지 일반재정으로 흡수되면 시민은 계속 “그해 예산”에 의존한다. 후퇴가 반복된다.

DCA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묻는다. **보유세·개발이익·지대 환수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으로 귀속시키면 어떨까.**

2. 지방재정 논점이 ‘세율 논쟁’에 갇히기 쉽다

취득세 의존 구조를 바꾸려면 “취득세를 내리자/말자”를 넘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 수입원(귀속 규칙)**이 필요하다.

(3) DCA식 수정안

발제 2의 정책제언 파트에 아래를 “추가 선택지”로 붙이면, 세제 논쟁이 “귀속 규칙”으로 확장된다.

• (제안 A) 보유세 강화분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으로 자동 귀속

보유세(또는 지대·개발이익 환수) 강화는 “걸어서 쓰는 것”에서 끝나기 쉽다. 강화분의 일정 비율을 시민 공동자산(신탁/계정)에 적립해 미래의 기본배당 재원으로 삼으면, 조세저항을 줄이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 (제안 B) 지방재정 공백은 ‘지방 둑 자동배분 규칙’으로 메운다

취득세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해도, 지방재정 공백이 걸림돌이다. 이때 대안은 “다른 세목 올리기”만이 아니라, 시민 공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당·이자·인프라 수익) 중 일부를 지방에 자동 배분하도록 규칙을 고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 (제안 C) ‘현금세’와 ‘자산귀속(지분전환)’을 분리해 설계한다

정치·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현금세가 담당한다. 동시에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영역에서는, 세원 일부를 **자산(지분·수익권)** 형태로 귀속시키는 “자산귀속 레일”을 병렬로 만든다. 이것이 DCA의 핵심 설계다.

토론문(조영철)에 대해

(1) DCA 관점에서 토론 1에 추가돼야 할 질문

토론이 어떤 결론에 서든, DCA 관점에서는 아래 질문이 빠지면 논의가 “세율 조정”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세목(보유세/거래세/양도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무지분 상태’를 끝낼 수 있나.
- 세제가 강화되더라도 정치적 후퇴가 반복될 때, **시민이 매년 ‘지출정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귀속 규칙)**가 있나.
- 부동산·금융에서 환수한 돈이 일반재정으로 소멸되는 대신, 시민의 장기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자동화된 귀속 장치**를 도입할 수 있나.

(2) DCA식 “한 문단” 제안(토론 1 말미에 붙일 문장)

- 자산과세 논쟁은 세율과 세목의 조합을 넘어, 환수한 돈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귀속되는지(현금 지출인가, 시민의 자산 축적인가)를 함께 다뤄야 한다.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별개로, **환수분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신탁·계정)에 자동 귀속시키는 장치**를 병렬로 도입하면, 조세저항과 정책 후퇴의 위험을 줄이면서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감세로 주가지수 부양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이상민)에 대해

(1) 원문 요지(핵심만)

토론 2는 주가지수 상승을 국부나 실물경제 개선으로 자동 등치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GDP(플로우) 중심의 국부 개념, 주식의 잔여청구권이라는 관점, 제도 신뢰·계약집행 가능성 개선(상법 개정 등)과 노동안전 강화가 주가와 GDP를 함께 높일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2) DCA 관점의 결손(무엇이 빠졌다)

이 논지는 “주가=국부” 단순화를 교정하는 데 유효하다. 다만 불평등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는다.

- 주가가 오르면 ‘누가’ 이익을 얻나

제도 신뢰가 개선되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소유가 극도로 집중돼 있으면, 그 상승은 성장(플로우)의 과실을 소유(스톡)로 빨아들이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료집에는 상위 소수 주주 집중과 주가상승 시 격차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있다.

(3) DCA식 수정안

토론 2의 결론부에 아래를 덧붙이면, “성장-주가-불평등” 연결고리가 완성된다.

- 주가 상승이 실물(생산성·제도 신뢰) 개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주식 소유의 집중이 크면 주가 상승은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 따라서 정책 목표는 “주가를 올리자/말자”가 아니라, 성장·제도개혁의 과실이 시민에게도 자동 귀속되는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 DCA 관점에서는 이를 위해, (1) 자본이익 과세 정상화(토론 3의 주제)와 함께, (2) 일정 비율은 현금재분배로만 쓰지 말고 시민 공동자산에 자산 형태로 누적 귀속시켜, 주가 상승의 과실이 장기적으로 시민의 배당·기본지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중심으로 본 자산 격차와 과세 공백 (류이근)에 대해

(1) 원문 요지(핵심만)

토론 3은 최근 주가 급등 속에서 부유층 주식평가액과 차익이 크게 늘었고, 한국 종시의 양도차익 과세가 느슨해 “tax haven”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미뤄지거나 폐지된 맥락과, 과세 공백이 금융자산 격차를 키운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2) DCA 관점의 결손(무엇이 빠졌나)

토론 3의 결론(과세 정상화 필요)은 DCA도 동의한다. 다만 과세만으로는 다음이 남는다.

1. 과세는 ‘환수’이고, DCA는 ‘귀속’이다

환수(세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이 시민의 자산으로 쓰여 다음 세대에도 작동하는 권리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 주식 소유의 집중이 크면, 주가상승·감세·유예는 곧바로 ‘귀속 격차’로 번역된다
2019년 기준으로 극소수 주주가 주식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가 오르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3) DCA식 수정안

토론 3의 정책대안 파트에 아래 2단계를 추가하면, “과세 정상화 → 시민 자산화”로 논리가 닫힌다.

- 1단계(단기): 과세 공백을 메운다(토론 3의 결론 유지)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을 맞추고, 양도차익 과세 공백을 줄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회복한다.
- 2단계(중기): 환수분의 일부를 ‘시민 공동자산’으로 귀속시킨다(DCA의 추가)
과세로 확보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소진하는 방식만으로는, 정책 후퇴가 반복되기 쉽다. 그래서 확보 재원 중 일부는 “현금지출”이 아니라, **주식·인프라 수익권** 같은 자산 형태로 시민 공동자산(신탁·계정)에 누적시킨다. 이렇게 하면 주가 상승 국면에서도 그 과실 일부가 시민의 장기 배당·기본지분으로 연결된다.

맺음말: “증세 정치”를 넘어 “귀속 정치”로

자료집은 “민주주의 정치는 증세를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증세 정치의 필요, 정치연합의 필요를 강조한다.

여기에 공주민제(DCA)는 한 문장을 추가한다.

- 증세 정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끝내기 어렵다.
- 다음 단계는 **귀속 정치**다. 즉, 사회가 만들어낸 자본소득의 일부가 시민에게 “현금지출”이 아니라 **자산(지분·수익권)**으로 자동 귀속되도록 규칙을 고정하는 정치다.
- 이 규칙이 고정되면, 감세·유예·특례 같은 후퇴가 반복되어도 시민의 자산 기반은 누적된다.
- 불평등 해소는 “더 걷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소유하나를 바꿀 때,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